

전남 일부 'K-패스' 불참...대중교통 할인 소외 어쩌나

고흥·화순 등 12곳, "환급 효과 없고 수요 적어 신청 안해" 대안적 지원안 검토 필요...도, 수요조사 뒤 내년 확대키로

전남의 12개 지자체가 정부의 '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미신청 지자체들은 K-패스의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예상돼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미신청 지자체 주민들은 K-패스에 가입할 수 없어 타지역에 가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서다.

27일 전남 22개 지자체에 따르면 K-패스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지자체는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등 12 곳이다.

K-패스는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고물가와 대중교통비 인상으로 경

제적 부담이 컸던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K-패스는 대중교통을 월 15~60회 이용시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서비스로 일반인은 20%, 청년(만19~34세)은 30%, 저소득층은 53%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경우 일반인은 1만4000원, 청년은 2만1000원, 저소득층은 3만7000원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12개 미신청 전남 지자체는 모두 인구 10만이 넘지 않는 지역으로 대다수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맞지 않는다"거나 "이미 다른 교통모델사업을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

으로 확인됐다.

"1000원 버스"와 같은 단일요금제나 무료버스를 운영하고 있어 할인 카드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고흥, 화순, 영광 등 9개 지역은 단일요금제를 시행 중이고, 일부 지역은 무료버스 정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이라는 것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광역이동하는 농어촌버스가 없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요가 적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미신청이유를 설명했다.

영암군과 진도군은 각각 오는 9월과 7월부터 무료버스 정책을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K-패스 도입의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고 사업 신청을 하지 않았다.

농어촌 지역 특성상 고령 승객이 많은데, 대부분 현금이나 승차권을 이용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카드를 신청하고 가입을 해야 하는 K-

패스를 이용할 주민이 적을 것으로 예상돼 신청을 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었다.

고흥군 관계자는 "매년 운송 수입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자 80%가 현금이나 승차권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지역 특성상 K-패스 이용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 여겨 사업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도군은 "버스에 단말기가 없어 카드를 이용하는 K-패스는 지역 내에서 사용이 불가한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K-패스 가입자는 사업 미신청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미신청 지자체 주민들은 K-패스에 가입할 수 없어 타 지역에서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내에서는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더라

도 타 지역에서는 할인을 못받게 돼 '농촌 소외'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진보당 박형태(장흥1) 전남도 의원은 최근 전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전남은 K-패스 참여하지 않은 지역이 많은데다 서울의 '기후동행카드'나 경기도의 'The 경기패스' 같은 특색 있는 정책도 없어 더욱 낙후한 대중교통지역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서울 강남으로 K-패스에 의해 2400원이면 갈 수 있는데 반해 장흥 청년은 비슷한 거리인 광주를 가려면 무려 5배 가까운 1만1500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남도는 주민들의 문의가 잇따르자 올해 하반기 다시 K-패스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신청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2024년도 광일보훈대상 및 호국보훈의 달 포상식

2024. 6. 27.(목) / 정부광주지방법동청사 2층 성관식실



광일보훈대상 시상식 2024년도 광일보훈대상 시상식이 27일 오후 정부광주지방법동청사 2층 성관식실에서 열렸다. 하성일 광주지방법보훈청장, 광주일보 최재호 전무이사를 비롯한 5명의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

현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친족 간의 발생한 재산범죄도 이제 모두 처벌이 가능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특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과거에는 가족간의 용서가 당연했지만 경제적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친족간 재산범죄가 강력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5월 8일자 6면)이 고려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재판소(현재)는 27일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내년 12월 31일 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 할 때 까지 처벌조항 적용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친족상도례는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특례로 1953년 형법 제정시 도입됐다.

현재는 "친족상도례의 취지는 가족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깨지는 것을 막는데 있다"면서 "경제적 이해를 같이하거나 정서적으로 친밀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용인 가능한 수준의 재산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내지 처벌에 관한 특례의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다"고 친족상도례의 입법 취지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현재는 현행 친족상도례 조항이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친족 관계만 있으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는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의 특성은 일

반화하기 어려운데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되어 본래 제도 취지와는 어긋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득액이 50억원이 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죄,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공갈이나 흥기를 든 특수절도 범죄 등까지 친족상도례를 통한 가족 내의 손해 회복과 용서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장애인, 미성년자 등)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도 고려됐다.

현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이런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거의 대부분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형사 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부모·자식)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사이에서 벌어진 재산범죄 중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범죄에서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절도와 공갈, 사기, 횡령 등 경우에 따라 피해가 큰 범죄도 부모나 자식이 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 변화와 함께 친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친족간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현실에 맞게 손질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는 이날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을 제외한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형법 328조 2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성희룡 의혹' 광주 남구의원, 의장 선거 후보 등록 논란

성희룡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시 남구의회 의원이 의장 후보로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광주시 남구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제9대 남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경선 후보에 A의원이 등록했다.

A의원은 지난 5월 상임위원회 자료를 건네기 위해 의원실에 들른 의사국 직원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달 초 관련 의혹을 전해 들은 다른 직원이 이를

황경아 남구 의장에게 보고하면서 조사가 착수됐다.

당초 B씨가 A의원의 정계를 원하지 않아 윤리특별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단, 기초의회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B씨가 맡은 상임위 변경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A의원이 의장 후보에 등록하면서 B씨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임위가 바뀌면 B씨가 해당 의원을 대면할 기회가 없

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의장으로 선출되면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황 의장은 "A의원의 의장선거 출마로 B씨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8일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절차와 A의원 회부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구의회 의장 선거는 오는 29일 민주당 내부경선을 거친 후 다음달 4일 치러질 예정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